

1월 보건복지동향

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
- 편집자 주 -

■ ■ ■ 항생제 처방률 공개 후 의료서비스 이용 · 공급 인식도 조사 결과

- 국민들은 병원과 의원별 항생제처방률 등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결과로 나타난 의료기관별 정보를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며, 병원 또는 의원들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처방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, 지난 '06년 2월 급성상기도감염(목감기 등)에 대한 항생제처방률 공개 이후 실시한 국민 및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이용, 공급행태 변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(급성상기도감염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성인 남녀 1,003명, 의사 503명) 결과,
 - 의료 소비자의 21.5%(216명)가 항생제 처방률 공개 사실을 알고 있으며, 그 중 33.3%(72명)는 공개정보를 확인하였으며, 정보를 확인한 소비자 중 40.3%(29명)는 다니던 의료기관을 바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.
 - 의사의 경우 95%(478명)가 처방률 공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, 실제로 항생제 처방을 줄였다고 응답한 의사는 32.6%(164명)로 조사되었다.
 - 특히,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던 의료기관과(17.6%p), 환자에게 항생제 처방률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 의료기관의(17.8%p) 처방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국민과 의료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,
 - 항생제처방률을 포함하여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, 그 결과를

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※ '06년 2/4분기 약제적정성평가결과 정보공개 전 · 후 항생제 처방률 감소 : 11.8%p ('05.2분기 65.9% → '06.2분기 54.1%)

※ 분기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및 '06년 2/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에 게재

- 처방률 공개정보 : www.hira.or.kr/건강정보/평가결과공개

-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: www.hira.or.kr/정보공개/평가자료

■ ■ ■ “노인일자리사업, 노인주유원 인력뱅크 본격 추진”

- 보건복지부는 1월 17일(수) 오후 2시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주유소협회(회장 함재덕)와 협약식을 갖고 민-관 협력사업으로 노인주유원 인력뱅크를 구축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하였다.
 - 한국주유소협회(이하 '협회')는 전국 15개 지회를 통해 주유원 교육에 필요한 강사 지원 및 실습주유소 제공, 주유소 DB 제공과 파견연계, 지속적인 노인채용 주유소 개발의 역할을 담당하고,
 - 한국노인인력개발원(원장 변재관, 이하 '개발원')은 온라인 인력뱅크를 구축하여 노인주유원의 모집 및 교육, 파견,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.
- 노인주유원 인력뱅크 사업은 노인들을 주유원으로 양성해 인력풀을 구성하고, 인력이 필요한 주유소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사회활동과 소득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.
 - 지난 해 하반기 3개월간에 걸쳐 산업자원부, 정유4사 및 주유관련 협회의 협조 하에 수도권 및 6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, 금년부터 본격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.
- 노인주유원 인력풀은 시니어클럽, 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(100개소)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(247개소)에서 주유원 근무를 희망하는 노인을 모집해 교육훈련을 거쳐 구축할 계획이다.
 - 개발원은 금년 2월까지 인력뱅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협회의 홈페이지와 연결하게 된다.
 - 또한 2월 중에 참여노인 모집 및 선발, 교육, 파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

한 후 수행기관별로 참여노인을 모집하여 3월 중에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쳐, 2,000명의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이다.

- 복지부는 금년에 1,000여명의 노인들에게 주유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연간 60억원 가량의 소득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
- 또한, 인력뱅크를 통하여 노인주유원을 안정적으로 파견함으로써 주유소의 운영여건을 개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.
- 이날 협약식에서 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“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노인일자리창출에 나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”이라며 “이번 사업을 계기로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”고 말했다.
- 또한, 한국주유소협회 함재덕 회장은 “이번 사업이 주유원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■ ■ ■ 건강보험 癌 환자 치료비 부담 크게 줄어

- 2000년~2005년 癌환자 1인당 급여비는 ▶백혈병 1,354만원→2,704만원 ▶폐암 439→792만원, ▶간암 426→660만원, ▶위암 401→615만원
- ※ 癌환자 등록제(법정보인부담률 10%로 인하)시행,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결과
- 보장성 강화 전·후 암진료비의 본인부담률(비급여 포함) 변화
- ※ 전체 : 50.7%(등록전)→33.9%(등록후), 입원 : 51.4%(등록전)→37.0%(등록후), 외래 : 48.1%(등록전)→24.1%(등록후)
- 실증 사례
- ※ 36세 여자, 백혈병, 66일 입원, 전체 의료비 74,453천원, 본인부담 12,942천원 본인부담, 보장률 82.6%
- ※ 69세 여자, 폐암, 59일 입원, 전체 의료비 44,496천원, 본인부담 12,017천원 본인부담, 보장률 73.0%
-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속 추진 예정 ⇒ 환자부담도 줄어듦 것으로 전망

■ ■ ■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, 전문사회복지사 신설

- 보건복지부(장관 유시민)는 사회복지법인·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, 입법예고('07.1.24~2.13, 20일간)했다.
- 그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, 일부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,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확대(5인→7인이상)하고,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/4 이상을 시·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.
- 또 이사의 1/3이상은 사회복지분야,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하도록 했다.
-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, 예·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.
- 또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 1·2·3등급에서, '전문사회복지사' 제도를 2009년부터 새로 도입하고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하기로 했다.
- 아울러,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국가 표준을 마련하고, 서비스 수준 평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.

■ ■ ■ 의료기관, 앞으로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 못해

- 병·의원의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며,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.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을 확정·공포하였다.
- 복지부는 그동안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를 유권해석으로 금지해왔으나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.
- 입원실이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재난 발생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의 조성이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. 이에 따라 앞으로 지하층에는 입원

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, 이미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지상층으로 이전토록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.

- 복지부는 중환자실이외에 신생아중환자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.5명 이내, 병상당 면적 5㎡ 이상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.
- 중환자실에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.2명 이내로 두어야 하고 병상당 면적을 10㎡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.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원은 전체병상의 5%이상을 중환자실로 설치해야 했으나,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동 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중소병원의 병상 확보 의무를 완화하였다. 중환자실 관련 조항은 앞으로 수가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등 후속 작업이 남아있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.
- 한편,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도 약사법에서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·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하였다. 동 조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일선 한방 병·의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.

■ ■ ■ 금년도 저출산 3.4조원 · 고령사회 대비 3.9조원, 총 7.3조원 지원키로

-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1.31(수)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, 금년도에 추진할 부처별·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
- 2007년도 저출산·고령사회 대비 총 7조 3,132억원(중앙부처 사업 5조 8,966억원 + 지자체 자체사업 1조 4,166억원)을 투입, 2006년 5조 7,445억원 대비 1조 5,687억원(27.3%) 증가
 - 저출산분야: '06) 2조 4,011억원 → '07) 3조 4,040억원(10,029억원, 41.8% 증)
 - 고령사회 대비: '06) 3조 3,424억원 → '07) 3조 9,063억원(5,639억원, 16.9% 증)
- 19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규모는 총 5조 8,966억원으로
 - 저출산대책에 '06년 2조 1,445억원보다 8,998억원(42.0%) 증가한 3조 443억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하여 86개 과제를 추진(별첨3)
 -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'06년 1조 3,166억원보다 2,690억원(20.4%) 늘어난 1조 5,856억원을 투입하여 77개 과제를 추진(별첨4)
 - 성장동력분야 59개 과제에 '06년 1조 973억원보다 1,665억원(15.2%) 늘어난 1조 2,638억원을 지원(별첨4)

■ ■ ■ '07년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 17,014천명으로 확대

- 보건복지부(장관 유시민)는 '07년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'06년 16,207천명에서 17,014천명으로 확대·선정하였다고 1월 25일 밝혔다.
- 대상자 선정 기준은,
 - 위·간·대장·유방·자궁경부암의 5대 암종에 대하여,
 -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·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'06년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3,000원으로, 직장가입자는 52,500원 이하인 자로,
 - 장애인 및 농어촌·도서벽지 주민의 경감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건강취약계층 국민의 대부분이 포함되었으며,
 -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,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다시 대상자에 포함하여 수검기회를 확대하였다.
- 또한,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,
 - 5대 암종에 대하여 국가 암조기검진을 통하여 신규로 암을 확진 받을 경우에는
 -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,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,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.
- 올해 수검자 목표는 '06년 300만명에서 '07년 375만명으로 전년 대비 25% 증가되었고,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.
- 한편,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2월 초에 개별적으로 검진표가 포함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.

■ ■ ■ 장애인 등 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나

-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이용시 느끼는 만족도와 이용정도를 조사한 결과, 만족도는 서울이 65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시설별 이용빈도는 근린생활시설이 68%로 나타났다.
- 만족도는 서울 다음에 부산(65.6%), 충북(64.8%) 순으로, 시설로는 근린생활시설(동사무소·우체국 등) 다음으로 의료시설(32.3%), 문화 및 집회시설(29.4%)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※ 2003년도 편의시설 만족도 조사결과는 평균 33.2%(설문조사, '03. 3~4)

- 개선이 요구되는 편의시설의 경우 높이차이 제거가 44.9%(지체·뇌병변·시각장애인만은 21.4%)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시설로 조사되었다.
-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같이,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와 출입구(문) 등의 이용에 장애인 등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, 앞으로 건물 신축시 사전점검제 등을 강화하여 시설주가 법적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·감독할 계획이다.
- 또한, 금년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실태 점검시 주출입구 높이차이와 출입구(문)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.

■ ■ ■ 건강보험료 6.5% 인상되었으나, 65세이상 노인등,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확대

-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이재웅)은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험료 6.5%인상을 2007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.
 - 올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주요 원인은 2005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따른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을 인하 등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및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에 대비하여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·유지하기 위한 것이다.
 - ※ 보험료율(액) 6.5% 인상
 - 직장가입자 : 4.48%→4.77%(0.29%P↑)
 - 지역가입자 : 소득, 재산등에 따른 평가점수당 131.4원→139.9원(8.5원↑)
- 지역가입자는 연령, 자동차 연식에 따른 세액변경 등으로 추가 인상 또는 인하
 -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세액변경,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6.5%외에 추가로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가 있으며, 이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.
 -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보험료는 하한선이 인하되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, 직장보험료는 상한선은 높아져 고소득층은 부담이 증가된다.
 - 지역가입자 하한선은 35점에서 20점으로 인하
 - 직장가입자 상한선은 보수월액 5,080만원에서 6,579만원으로 상향조정
- 또한,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, 등록 장애인, 모·부자세대, 조손가정, 소년소녀가장, 만성질환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정관을 개정하였다.
 - 작년까지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,139천세대에 대해 건보료를

- 10%~30% 경감하였으나
- 1월부터는 연소득 360만원 이하 이고 과표재산 1억 3천만원 이하인 취약계층 세대로 경감 대상이 확대된다.
 - 특히 경감대상 세대 중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는 소득창출 여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경감기준에 따라 현재 10%~30%를 경감하던 것을 30%로 경감을 확대하였다.
- 이는 실질 소득의 증가없이 재산과표의 증가로 인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에서 제외되는 세대를 최소화하고 실질 소득이 낮은 비경제활동 계층에 대하여 경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인세대, 저소득 취약계층 등 지역가입자 총812만세대 중 243만세대(29.9%)가 각종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.
- 이번 조치로 경감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은 보험료 6.5%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경감으로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줄어들었으며, 보험료 인상 등이 반영된 1월분 고지서는 24일부터 발송하였다고 밝혔다.

■ ■ ■ 건강보험료 고액체납 3만8천여세대 압류재산 공매 실시 - 고소득 전문직 255명, 재산있는 고액체납자 37,649명 대상으로 -

-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이재웅)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220만세대중 고소득 전문직(의사 등 10개 직종) 종사자(255명, 9억원)와 재산있는 고액 체납자 37,649세대(체납금액 1,229억원)에 대하여 특별 집중 관리를 통해 공매 등 강제 징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.
- 우선 특별관리대상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후 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공매를 의뢰 체납보험료를 연내 1,000억원을 징수하여 재정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.
- 공단은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권리분석과 방문독려를 위하여 그동안 6개 지역본부 체납관리전담팀에서 실시하던 특별관리를 전국 178개 모든 지사로 확대하였다
- 아울러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환가가치가 없는 세대는 보험료 조정을 통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,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체납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.
- 또한 저소득·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자치단체, 회사, 종교단체 등과 연결 보험료 지원협약을 확대하여 병·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.
- 2006. 12월 현재 3개월이상 보험료 체납세대는 220만세대에 체납금액은 1조3500억원이다.